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충남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come Outflow between Regions: focus on Chungnam

박 경**

충남은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나, 생산과 소득의 괴리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생산과 소득의 괴리가 큰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지역 내로 배분되지 않고 지역 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이후에 발표된 분배 지역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충남,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의 괴리 및 소득의 지역 간 유출입을 파악해 보았다. 충남이 특히 타 지역에 비하여 소득의 역외 유출이 심한 것은 분공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기업 유치와 외생적 성장전략 기조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소득·소비의 집중지로서 서울의 일극집중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서울-분사경제, 지방-분공장 경제란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

주요어: 분공장 경제, 수도권 집중, 지역 간 소득격차, 소득의 유출

* 이 논문은 지역정책포럼 특별세미나-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2011.6.17, 배제대, 주관: 지역정책포럼, 대전일보, 아태정치학회)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경제의 변화와 과제」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분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목원대학교 디지털 경제학과(bauiro@mokwon.ac.kr)

1. 서론

충남은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지역내 총생산(GRDP)이 3배 가까운 규모로 커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p(4.2% → 6.1%)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3,338만 원으로 울산의 4,706만 원에 이어 전국 제2위의 수준이며, 서울의 2,557만 원보다 약 1.3배나 높다(2009년 기준). 이런 사실로부터 그간 충남은 지역경제 성장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충남이 실제로 서울보다 더 잘사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공감하지 못한다. 이것은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전남, 울산, 경북, 경남 등 1990년대 이후 가공조립과 기초소재 산업들이 빠르게 집적하여 발전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서울보다 높거나 못지않지만 체감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그다지 높지 못하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연구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들 지역의 높은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에 주목하여 중화학공업이 집중한 지방 공업지역과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한 지방 대도시 간의 생산성 격차가 지역 간 격차의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해 왔다(문형표, 2003; 유병철·박성익, 2004; 김종일, 2008 등). 특히 김종일(2008)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는 경공업의 퇴조와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대도시 지역과 중화학공업이 급성장하여 제조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도시 지역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이 더 잘살고 충청권의 광역 대도시인 대전이 더 못산다고 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소득이나 소비 수준은 대전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과 분배 소득의 괴리 때문

이다. 지역내 총생산만 가지고 지역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되어 왔으나, 통계청에서 분배 지역소득을 2009년에서야 개발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에 발표된 생산과 분배 지역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충남,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의 괴리 및 소득의 지역 간 유출입 규모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간략히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분공장 경제로서 충남의 특징 중 하나인 생산과 소득 및 소비의 괴리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소득의 유출 규모를 지역소득 계정을 가지고 분석해 본다. 여기서는 충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소득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고, 이 소득 유출입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지역격차 요인과 구조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인당 지역소득의 요소 분해를 통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연구의 개관

그간 지역 경제의 소득 유출과 생산 및 소득의 괴리에 주목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김종일(2008)은 생산과 지출 지역계정 통계를 가지고 비도시 지역과 도시지역의 생산 및 소비를 비교하여, 생산은 비도시지역에서 높고 소비는 도시지역에서 더 높으며, 그 이유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비도시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의 증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역외 소비지출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종일, 2008: 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측면에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소득의 유출입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격차는 제조업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광역도시와 비대도시 공업지역간의 격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한편 2005년에 실측 지역산업연관표(2003년 기준)가 발표된 이후 지역의 최종수요 및 생산의 역의 이출입과 파급 효과 분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분석되기도 하였다(권태현·박민철, 2009;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7 및 2008).¹⁾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본원소득이 발생지와 배분 지역의 차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고,²⁾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배분된 소득이 지역 간 거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쓰이지 않고 타 지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이다. 전자는 지역소득 통계에서 분배면의 소득 이동으로 파악할 수 있고, 후자는 지역산업연관분석 통계에서 지출면의 부가가치와 중간수요의 이출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최종수요 및 생산의 이출입을 분석하려는 경우 실측 지역산업연관표가 2003년에 한 번만 작성되었고, 시·도별이 아니라 권역별로 추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역의 생산과 소득의 괴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본원소득의 이동은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 간 소득의 유출입은 지역소득계정의 생산과 분배 소득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이 지역 간 소득의 유출입이 이 글에서 주로 분석하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역경제는 개방형 체제이므로 지역 간 소득의 유출입은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훼손할 정도로 클 경우 지역경제의 자립성이 문제시된다. 이런 주제는 분공장 경제론, 내발적 발전론 등에서 연구되어 왔다. 분공장 경제론에서는 외부자본, 특

1)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7 및 2008)에서는 충남의 생산 규모보다 소비 규모가 작은 것을 지역 수요 및 생산구조면에서 역외 이출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즉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업 등이 취약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이 수도권 등 역외 소비로 유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 영업영역가 사업소나 분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송금되거나, 근로자의 취업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통근하는 경우의 피용자 보수의 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히 해외직접투자(FDI)가 유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해 다루어 왔는데, 이 주제는 지역경제학, 경제지리학, 지역발전론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다. 초기 문헌(1960년대 및 1970년대)의 대부분은 FDI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분공장 가설(branch plant syndrome, 낮은 고용, 낮은 지역연계, 낮은 연구개발투자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문헌들은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추세나 유치 지역의 제도적 역량의 증대란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현지 분공장들이 점차 지역경제에 뿌리내리기(embedded)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helps et al., 2003).

그러나 1990년대 및 2000년대 이후에 연구된 경험적인 연구들을 종합하면 어느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는 결론은 얻기 어렵다.³⁾ 예를 들어 Young et al.(1994)이나 Cooke et al.(1995)은 다국적 기업 분공장이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나, 스코틀랜드를 대상으로 연구한 Turok(1993)은 해외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스코틀랜드 외부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Phelps(2008)는 이런 역내 연계가 결여된 이유로서 다국적 기업이 기본적으로 자체 네트워크 내에서 완결적인 조달구조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도 있어 어느 한편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행태가 변모하고 있고, 각 지역의 제도적 역량(local institutional capacity)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공장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더라도, 모기업의 전략이나 유치지역의 제도적 역량 등에 따라 분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나 행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Jung Won Sonn et al.(2011)은 경험적 연구의 상당부분이 부정적 효과를 지지하더라도, 각 분공장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와 행태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떤 조건하에서 분공장들이 지역경제에

3) Jung Won Sonn et al.(2011)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분공장 논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잘 정리하고 있으며, 이하의 설명은 상당부분 여기에 의존한다.

뿌리내리는가(embedded) 하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내발적 발전이란 이름으로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연구된 바 있는데, 미야모토 켄이찌(宮本憲一) 등은 사카이·센보꾸(堺·泉北) 콤비나트와 나고야(名古屋) 인근의 옷카이찌시(四日市) 콤비나트의 사례를 연구하고, ① 이윤이 외지에 있는 본사에 유출되고, ② 지역 내 산업연관이 약하고, ③ 저임금 비숙련노동력이 대부분이며, ④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력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宮本憲一 외, 1990: 183).

이상에서 개관한 내발적 발전론이나 분공장 가설은 왜 지역 간 소득 유출이 큰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매우 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 글은 우선 충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의 유출 현황과 규모를 추정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공장 가설을 직접 검증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충남의 경우 소득의 유출이 크고, 그 원인 중에 분공장 경제라는 특징이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분공장 이론을 일부 원용할 것이다.⁴⁾

3. 충남 경제의 성장과 생산 및 소득·소비의 괴리

1) 충남의 성장률 추이

충남 경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전국적인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7~9%대의 고

4) 분공장 가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유치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 생산과급 효과, 연구개발투자, 지역기업과의 연계 및 조달구조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 중 최근에 충남을 대상으로 유치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홍성효(2011)가 수행한바 있다.

<표 1>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의 성장률(%)

시·도별	2007	2008	2009	2000~2009	2005~2009
전 국	5.6	2.7	0.8	4.6	3.7
서울특별시	4.4	2.9	0.9	3.6	2.9
부산광역시	4.8	1.2	-1.8	3.4	2.1
대구광역시	4.6	1.3	-4.1	2.4	1.2
인천광역시	7.4	1.7	-0.4	4.4	3.8
광주광역시	3.5	-0.8	0.1	4.0	3.1
대전광역시	3.1	1.3	0.2	3.9	2.1
울산광역시	4.2	0.8	-1.4	3.3	1.8
경기도	6.1	4.2	1.3	7.2	5.9
강원도	4.7	0.9	0.0	3.3	2.3
충청북도	5.8	2.0	4.5	4.4	3.3
충청남도	7.6	7.0	9.2	8.9	9.2
전라북도	5.6	1.4	1.0	3.3	2.9
전라남도	6.7	1.8	1.6	3.0	2.7
경상북도	8.7	0.8	-3.4	4.9	2.3
경상남도	5.4	4.8	-0.6	4.3	3.4
제주도	6.4	-3.7	4.9	4.1	2.0

자료: 통계청

성장을 보여 왔다(<표 1> 참조). 다른 시·도 및 전국 평균과 대비해 봐도 충남 경제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모습으로, 충남의 2000~2009년 평균 성장률은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약 3% 이상이나 높았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장이 호조를 보였던 수도권인 인천, 경기나 지방의 경남, 경북보다 훨씬 역동적 성장을 해 왔다(<표 2> 참조).

이에 따라 충남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충남의 순전입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의 규모는 2003년 이후 계속 정(+)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이 이전해 온 아산, 천안 등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런 충남의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은 제조업의 성장이었다. 충남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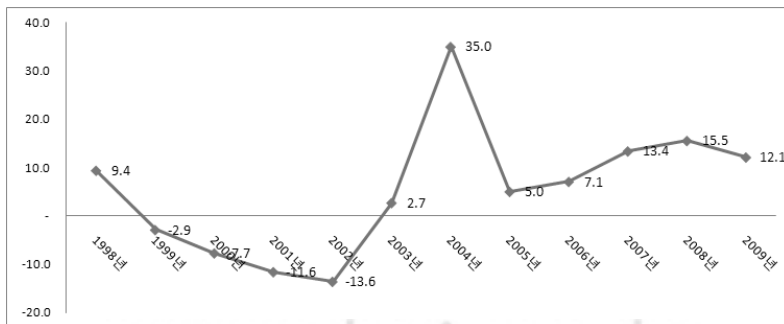
<표 2> 전국 대비 시·도별 성장 추이

구분	2000~2009 성장률 기준	2005~2009 성장률 기준
전국 평균보다 3%p 이상 높은 그룹	충남	충남
전국 평균보다 2%p 이상 높은 그룹	경기	경기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그룹	-	-
전국 평균보다 1%p 이내	경북	인천
전국 평균 -1%p 이내	인천,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제주	서울, 충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전국 평균 -2%p 이내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울산, 강원, 대전, 부산, 제주
전국 평균 -3%p 이내	대구	대구

조업의 비중이 2000년 37.9%에서 2009년 51.1%로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그림 2> 참조). 1995년 이후 GRDP(지역내 총생산) 성장의 부문별 기여율을 보면, 제조업의 GRDP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후반 53.5%에서 2000년대 전반 63.7%, 그리고 최근(2007~2009년)에는 73.8%로 상승하여 여타 산업을 압도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영상장비, 자동차 부문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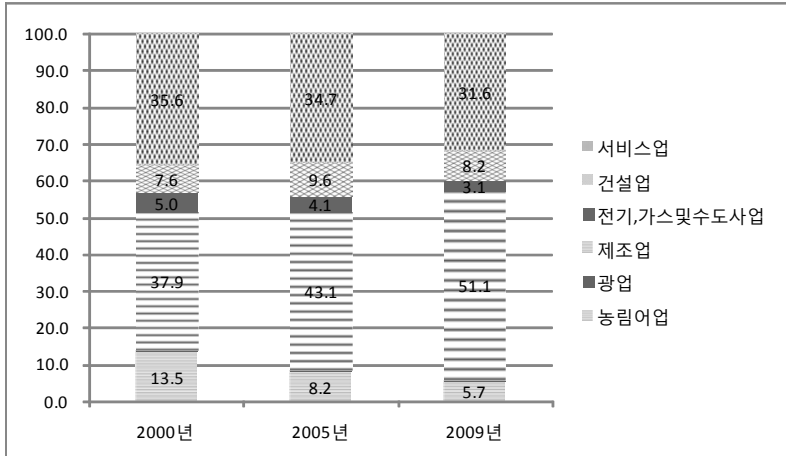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남도 내 순전입인구 규모 변화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임재영, 2010에서 재인용).

<그림 2> 충남 산업구조의 변화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표 3> 충남의 산업별 GRDP 성장기여율(%)¹⁾

	1995~2000	2001~2006	2007~2009
농림어업	6.0	0.3	5.5
광업	0.2	0.1	0.4
제조업	53.5	63.7	73.8
전기·가스·수도사업	11.0	6.4	7.4
건설업	-1.1	9.2	4.5
서비스업	30.5	20.3	8.4

주: 1) 산업별 기여율=(산업별 GRDP 변동분/전체 GRDP 변동분)×10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충남에서 이와 같이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수도권에 인접성과 교통의 편리성 등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배경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에 활발했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경우 2000년 2.6억 달러에서 2007년 12.4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국내 기업유치 건수도 2007년을 정점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나, 2000년의 394건 수준에서 2010

<표 4> 충남의 외국인투자 유치¹⁾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수	47	38	41	26	42	70	52	8
유치액(억 달러)	2.6	4.9	5.8	7.0	12.0	3.3	13.7	12.4

주: 1) 신고기준

자료: 충남도청(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8에서 재인용).

<표 5> 충남의 국내 기업유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 수	394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855	817	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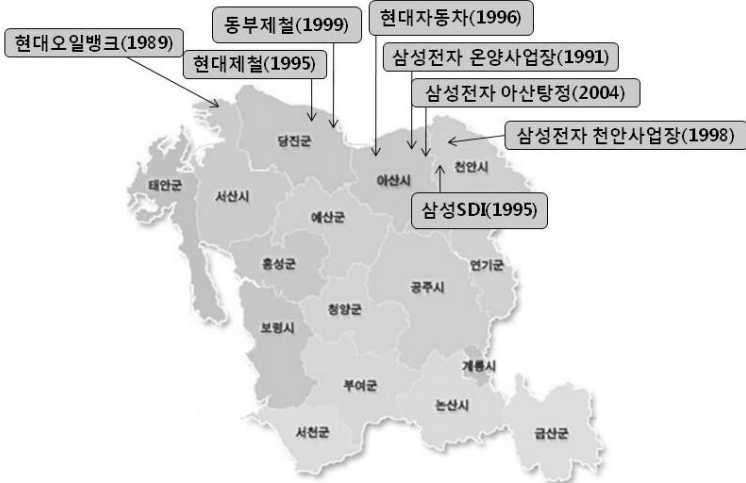
자료: 충남도청 내부 자료.

년의 683건 수준으로 증가했다(<표 4> 및 <표 5> 참조).

그러나 충남의 대기업들, 아산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서산의 현대오일뱅크, 삼성석유화학,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당진의 현대제철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서울에 본사가 입지하고 생산공장만 충남에 이전해 온 분공장으로서는(<그림 3> 참조), 막대한 매출액과 이익을 생산하지만 과연 얼마나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 오는가 항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런 점을 다음 장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 충남경제의 분공장 경제로서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사업체 조사(통계청)를 가지고 충남에 본사나 단독업체의 비중과 생산공장만 입지한 비중(제조업 경우만)을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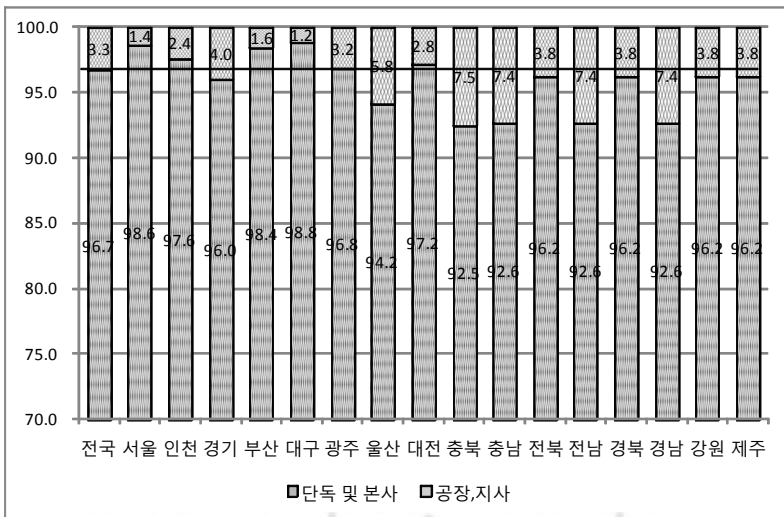
<그림 4>을 보면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본사나 단독업체의 비중이 낮고 공장이나 사업체만 입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사와 단독업체 비중의 전국평균은 약 96.7%이고 분공장·지사 비중의 전국 평균은 약 3.3%인데 반하여, 충남은 본사와 단독업체의 비중이 96.9%로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분공장·지사의 비중은 전국평균 보다 훨씬 높은 7.4%에 달한다. 흥미로운 것은 충남과 마찬가지로 그간 대

<그림 3> 충남 지역의 주요 생산공장 현황(괄호 안은 이전 연도)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1).

<그림 4> 시·도별 본사 및 단독업체와 공장·지사의 비중(제조업, 2009년)(%)



자료: 통계청, 전사업체조사(2010).

기업의 이전과 제조업의 성장률이 높았던 울산, 충북, 전남, 경남 등도 분공장·지사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인데, 이 지역들도 분공장 경제의 특징과 함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득의 역외 유출이 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생산과 지역 내 소득·소비의 낮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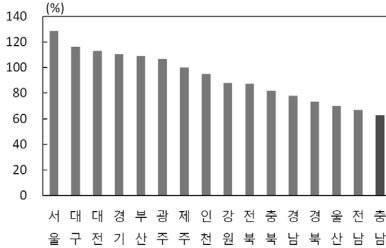
그러나 충남의 빠른 생산 증가와 달리 소득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된 것이 실제 지역의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전 등 지방대

<표 6>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총소득과 양자 간의 괴리율(2009년)

	지역내 총생산 (십억 원)①	지역내 총소득 (십억 원) ②	1인당 지역내 총생산(천 원)	1인당 지역내 총소득(천 원)	지역내 총생산 대비 총소득의 비율(%)②/①
서울	257,598	331517.8	25,666	33,032	128.7
부산	55,526	60558	15,996	17,446	109.1
대구	32,797	38128.2	13,419	15,601	116.3
인천	50,256	47829.7	18,999	18,082	95.2
광주	22,066	23545.5	15,230	16,252	106.7
대전	24,211	27400.9	16,077	18,195	113.2
울산	51,271	35908.7	47,061	32,960	70.0
경기도	208,296	230485.7	18,197	20,135	110.7
강원도	27,348	24119.9	18,833	16,610	88.2
충청북도	32,175	26273.7	21,730	17,745	81.7
충청남도	65,134	40940.9	33,381	20,982	62.9
전라북도	31,855	27867.3	18,477	16,164	87.5
전라남도	51,048	34109.8	28,974	19,361	66.8
경상북도	69,223	50676.6	26,562	19,446	73.2
경상남도	77,213	60141.1	24,616	19,173	77.9
제주도	9,648	9654.6	17,662	17,674	100.1
전국	1,065,665	1069158.2	21,861	21,933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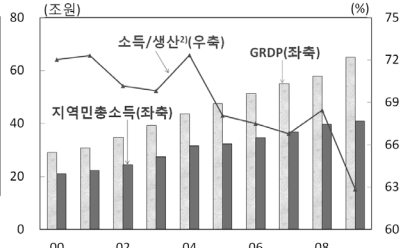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5> 시·도별 생산 대비 지역민 총소득 비율¹⁾(09년)



주: 1) 명목 기준, 지역민 총소득/GRDP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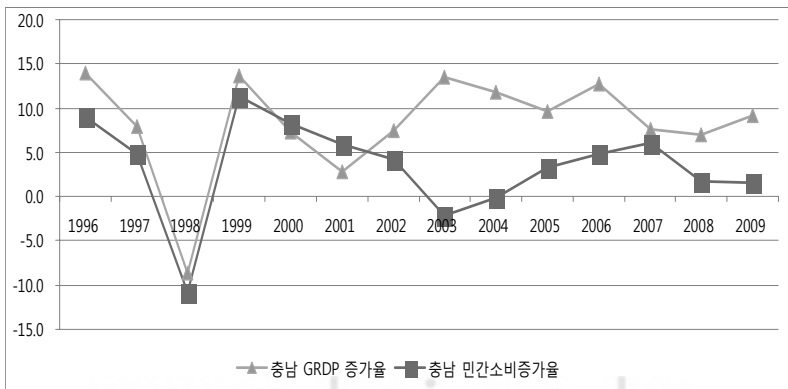
<그림 6> 충남지역 GRDP 및 지역민 총소득¹⁾



주: 1) 명목 기준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재인용)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대도시 지역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특히 충남지역은 2009년 지역민 총소득이 40.9조 원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 65.1조 원)의 62.9% 수준에 불과하여,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생산대비 총소득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 6> 및 <그림 5> 참조). 더구나 2000년대 이후 소득 증가 속도가 생산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생산 대비 총소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09

<그림 7> 충남의 민간소비증가율과 GRDP 증가율



자료: 통계청

<표 7> GR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 %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충남(A)	44.6	45.9	44.5	38.4	34.4	32.4	30.1	29.7	28.2	26.2
전국(B)	56.5	57.6	57.4	55.2	53.6	53.7	53.4	53.1	52.4	52.2
A-B	-11.9	-11.6	-12.8	-16.7	-19.3	-21.4	-23.3	-23.4	-24.2	-26.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년에는 2000년(72.0%) 대비 9.1%p나 하락하였다(<그림 6> 참조).

이런 생산과 소득의 괴리를 반영하여 소비활동도 장기간 부진을 지속 해왔는데,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1년 이전까지 GRDP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GRDP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이는 전국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2002년 이후도 GRDP 증가율과 유사하게 변동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충남지역의 GR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분석: 지역 생산 및 소득의 괴리와 소득의 역외 유출

1) 지역소득계정과 소득 유출

그러면 이와 같이 충남의 생산과 소득 및 소비가 괴리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충남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충남의 소득으로 전부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지역소득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보기로 하자.

그간 통계청에서는 지역내 총생산을 추계하면서 생산과 지출 총생산은 각각 1985년 및 1995년부터 발표해 왔으나, 분배면의 지역 소득은 2009년에 이르러서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분배 지역소득을 이용

하면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입되는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즉 부가가치를 말한다. 한편 지역민 총소득(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GRNI)은 일정기간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된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이는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지역 외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을 더하고 지역 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을 공제한 것으로(통계청, 2010), 이 순수취본원소득의 규모를 파악하면 소득의 지역의 유출입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GDP)에서 국민 총소득(GNI)을 뺄 경우 해외로 유출입되는 순수취요소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이다.

개념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경우 생산, 분배, 지출 3면 등가법칙에 의해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지출, 국내 총분배소득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지역 외로 거래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내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민 총소득은 지역 외로부터 순수취 본원소득의 크기만큼 차이가 나게 되며, 그 만큼 지역민 총소득이 지역내 총생산보다 크거나 작게 된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생산면에서 피용자 보수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종업원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통근할 경우 분배면에서 피용자

<그림 8>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 지표의 포괄 범위

산출액				
지역내 총생산(GRDP)				중간 소비
지역내 총생산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요소 소득				
지역민 총소득				
지역외로부터의 순수취 본원 소득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요소 소득			

보수는 종업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이 되며,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업 잉여도 기업의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타 지역의 소득이 된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93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방식에 따라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생산활동이 일어난 발생지 기준으로 추계하나, 지역민 총소득(본원소득의 분배)은 본원소득의 수혜자인 거주자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을 기준으로 편제한다.⁵⁾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이용하면 소득의 지역 외 유출입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다. 실제로 계산은 지역내 순생산과 순본원소득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였다.⁶⁾

$$\begin{aligned} & \text{지역내 순생산 ①} + \text{순수취 본원소득 ②} = \text{지역민 순본원소득 ③} \\ & \text{③} - \text{①} = \text{순수취 본원소득 ②} (+는 유입, -는 유출) \end{aligned}$$

순수취 본원소득은 다시 순수취 요소소득(피용자 보수+영업잉여)과 순수취 재산소득으로 나뉜다. 순수취 요소소득은 생산계정의 요소소득(발생지 기준)에서 분배계정의 요소소득(거주지 기준)을 빼서 구했다. 요소소득은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이므로, 이것도 각각의 유출입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 공표되는 지역소득 통계에는 분배계정에만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가 구분되어있고 생산계정에서는 요소소득 전체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구분하여 유출입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나, 그러지 못하여 아쉽다. 한편 재산소득은 금융소득(이자, 배당금)과 실물소득(임료)으로 나뉘는데, 타 지역에서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나 배당액이 거주지인 당해 지역으로 이전되는 부분에서 당해 지역에서 거래된

5)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지 기준, 발생지 기준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속인(屬地)주의와 속지(屬人)주의라고 한다.

6) 양자는 모두 총생산과 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분을 공제한 순 개념이므로 이론상 총생산에서 총소득을 뺀 금액이나 순생산에서 순본원소득을 뺀 개념은 같다.

이자나 배당액이 타 거주지로 이출되는 부문을 상계하면 순수취 재산소득을 구할 수 있다.⁷⁾

이상을 바탕으로 충남의 소득 유출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충남의 지역내 순생산은 총 53조 7,548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요소소득이 46조 6,733억 원이었고 순생산세가 7조 825억 원이었다(여기에 고정자본 소모분 11조 3,791억 원을 더하면 지역내 총생산이 된다). 그런데 지역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추계된 지역민 순본원소득(순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은 36조 1,231억 원으로 이 지역민 순소득과 지역내 순생산의 차이인 17조 6,317억 원의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된 소득(순수취 본원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요소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나누어 보면, 생산면에서 발생한 요소소득은 총 46조 6,733억 원이었으나, 실제 분배면에서 지역 내에 귀속된 요소소득(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은 28조 1,776억 원으로서 그 차이인 18조 4,957억 원의 요소소득이 역외로 유출되었으며, 사용 재산소득과 원천 재산소득의 차이인 순수취 재산소득은 8,640억 원의 유입을 기록하였다. 이 지역 외 유출 소득은 2009년도 충남의 지역 순생산의 약 3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남의 경우 지역순소득의 약 3분의 1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소득의 역외 유출은 지역 간 거래가 있는 한 충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표 10>에서 보면, 서울과 광역시(울산 제외)는 소득의 유입 지역이고, 경기를 제외한 다른 도 지역은 전부 소득의 유출 지역이다. 특히 지방 중에 순생산 대비 소득의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위별로 보면 충남이 1위이고, 다음이 전남, 울산 순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분공장 경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충남이 가장 높은 것은 그간 충남이 수도권과 인접하

7) 실제로는 원천재산소득에서 사용재산소득을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 표 8 > 지역내순생산의 구성(명목, 시장가격: 53,754.8십억 원)

비용자 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7,081.5)	고정자본 소모 (11,379.1)
요소소득(발생지 기준) (46,673.3)			

자료: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통계청)

< 표 9 > 지역민 순소득(순본원소득)의 구성(36,123.1십억 원)

순수취요소소득 (-18,495.7)	순수취재산소득 (864.0)	비용자 보수 (17,520.1)	영업잉여 (10,657.5)	순생산세 (7,081.5)	← 순본원소득 (그림자 안)
지역외로부터의 순수취 본원소득 (-17,631.7)		거주지 기준 요소소득 (28,177.6)			

자료: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통계청).

< 표 10 > 시·도별 지역내 순생산과 순본원소득 및 소득의 유출 비율(2009년 기준)

(단위: 십억 원, %)

	지역내 순생산 (시장가격) ①	순본원 소득 ②	순본원 소득 /순생산 (②/①)	순수취본 원소득 ③ (② - ①)	소득의 역의 유출입의 지역내 순생산 대비 비율(③/①)	순수취요소소득	순수취재산소득
						의 지역내 순생산 대비 비율	의 지역내 순생산 대비 비율
서울특별시	233,274.5	276,755.1	118.6	43,481	18.6	20.7	-2.1
부산광역시	48,696.6	54,051.5	111.0	5,355	11.0	10.7	0.3
대구광역시	28,945.7	34,215.1	118.2	5,269	18.2	13.3	4.9
인천광역시	42,749.4	43,489.2	101.7	740	1.7	5.0	-3.3
광주광역시	19,535.8	21,235.5	108.7	1,700	8.7	4.5	4.2
대전광역시	21,294.9	24,396.9	114.6	3,102	14.6	9.9	4.7
울산광역시	44,841.5	33,996.4	75.8	-10,845	-24.2	-24.4	0.2
경기도	179,400.5	198,963.3	110.9	19,563	10.9	13.1	-2.2
강원도	23,358.4	20,752.4	88.8	-2,606	-11.2	-18.7	7.6
충청북도	27,129.4	23,149.6	85.3	-3,980	-14.7	-18.7	4.1
충청남도	53,754.8	36,123.1	67.2	-17,632	-32.8	-34.4	1.6
전라북도	27,287.1	24,371.7	89.3	-2,915	-10.7	-17.3	6.6
전라남도	42,887.3	30,070.1	70.1	-12,817	-29.9	-33.9	4.0
경상북도	56,493.4	45,325.4	80.2	-11,168	-19.8	-22.5	2.7
경상남도	66,756.9	53,212.8	79.7	-13,544	-20.3	-22.9	2.6
제주도	8,285.8	8,288.8	100.0	3	0.0	-7.0	7.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여 수도권으로 소득의 유출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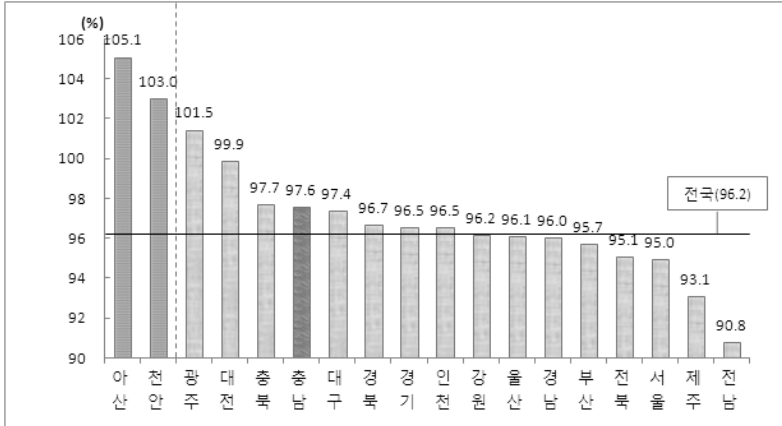
물론 이 자료는 소득의 역외 유출입 크기만 나타낼 뿐, 특정 시·도의 소득이 어느 지역으로 유출되는 지까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의 소득 유출의 경로가 대부분 수도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소득 이동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근권역과 인구 이동상황, 본사 소재지와 사업소 및 본사 간의 영업잉여 송금 행태, 개인, 법인 등의 재산소득의 구체적인 유출입 현황 등을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잉여나 재산소득의 유출입 파악은 실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고, 시·도 및 시·군별 통근권역과 행태는 인구총조사의 통근·통학 표본조사 원자료를 입수하여 추가로 분석해야 하므로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몇 가지 입수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득 유출의 경로를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인구총조사 인구/주민등록인구 비율은 95.5%로 전국 수준(94.0%)을 상회하며 16개 시·도 중 광주(101.5%), 대전(99.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특히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는 아산(105.1%) 및 천안(103.0%) 등에서 이 비율이 매우 높다(<그림 8> 참조).⁸⁾ 또 최근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홍성효(2011)에 따르면 충남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 중에 외지인의 비율이 국가산단에서 18.0%, 일반산단에서 35.5%로(유치 대기업의 대부분은 일반산단에 입지) 이전해 온 유치기업의 경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신 부임한 근로자의 비율이 타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천안까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KTX 등 한 시간 이내로 수도권에 접근 가능한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남 북부권은 광역 수도권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⁹⁾ 또한 충남 북부에 소재한 삼성전

8) 실제 거주인구(인구총조사 인구)는 해외 유학생 및 여행객 등이 일부 누락되어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9) 이런 수도권 접근의 편리한 교통망 때문에 충남 북부와 대전광역시와의 연계는

<그림 8> 시·도별 인구총조사 인구/주민등록인구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1)

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삼성석유화학 등은 회사당 연간 영업잉여가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삼성전자 영업이익 17조 원, 현대자동차 5조 6천억 원, 2010년 기준, 단 충남소재 공장을 포함한 회사 전체), 이 충남에서 발생한 영업잉여의 대부분이 본사에 계상된다고 한다면 충남의 요소소득 유출액 약 18조 5천억 원의 상당부분은 수도권으로 유출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중에서 대전광역시로도 일부 유출된 것이 있겠지만, 대전의 경우 유입소득(순수취본원소득)의 규모가 3조 1천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하고도 약 15조 원 이상은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대전의 통학통근 유입 및 유출지 3위까지 순위를 보면 대부분 대전 인근(충남 남부)이나 충북의 청주시이다.

<표 11> 대전의 통근·통학에 따른 유입, 유출 상위 시·군·구(2010)

	유입지 순위			유출지 순위		
	1	2	3	1	2	3
대전	충북 청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공주시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

자료: 통계청(2011), 인구총조사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의 표본집계 결과.

한편 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권역별로 합쳐보면,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표 12> 및 <그림 9>), 수도권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은 소득의 유출 지역이며, 수도권만 유일하게 소득 유입 지역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여타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출은 모두 수도권으로 유입되며, 수도권은 타 지역의 소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소득은 약 61조 원으로서, 이는 수도권 전체 순생산의 약 14%에 해당한다.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 울산, 충남, 전남, 경북보다 낮지만, 일인당 지역민 총소득으로 본다면 단연 전국 1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울산, 충남, 전남, 경북 등은 일인당 지역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역외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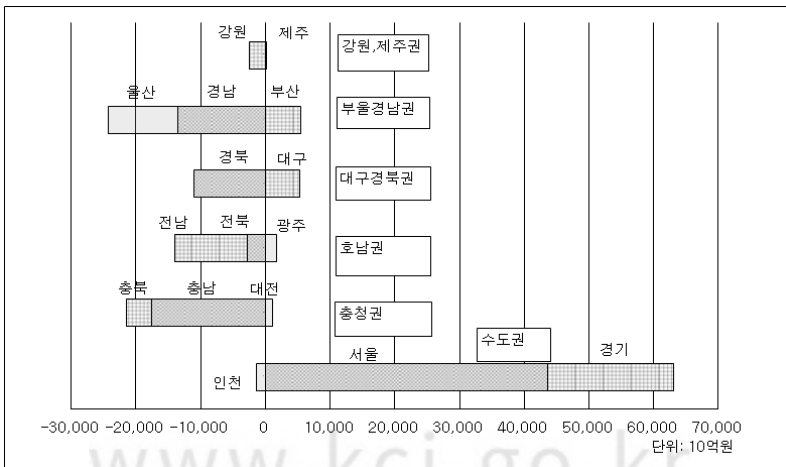
<표 12> 권역별 소득의 역외 유출입 규모

(단위: 10억 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부울경권	강원제주
소득의 유출입 규모	61,633.3	-20,613.0	-12,383.6	-5,898.7	-19,034.4	-2,602.9

주: 유입은 +, 유출은 -
자료: 통계청

<그림 9> 권역별 소득의 역외 유출현황



로 인해 그 만큼 생산이 지역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2) 지역소득의 요소 분해와 지역 간 격차 요인

지금까지는 주로 충남을 중심으로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현황을 살펴 보았지만 이런 소득 유출이 우리나라 지방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한다면, 우리나라 지역격차 요인과 수도권 집중현상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지역 간 소득 격차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생산면에서 측정된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김종일(2008)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격차 문제가 아니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은 비도시 지역과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지방 광역도시간의 문제라고 말한다. 단, 서울의 경우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에서 기인한 낮은 제조업 생산성을 상쇄할 만큼 고차 서비스업 발전에 따른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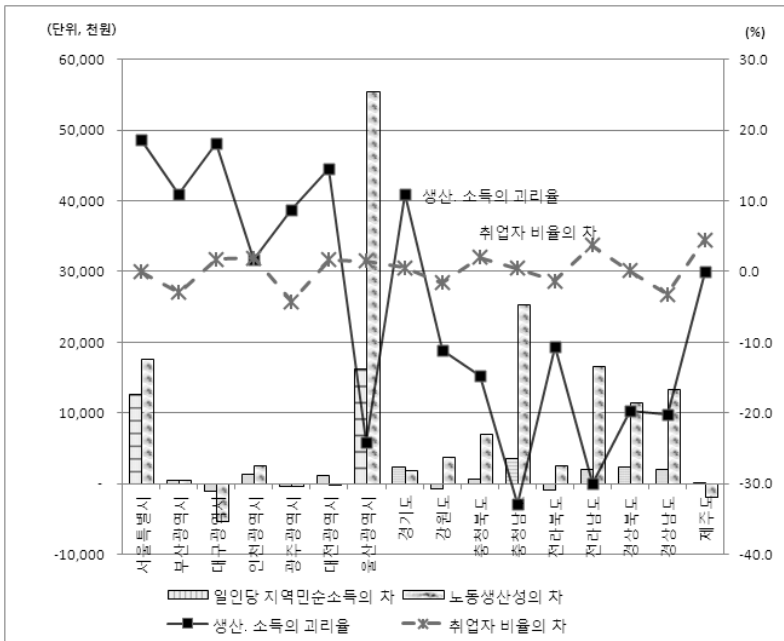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사실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유출 측면에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지역소득을 분해하여 지역 간 격차의 발생요인을 검토해보자. 일인당 지역민 순소득(순분원소득)은 다음과 같이 요인별로 분해할 수 있다.¹⁰⁾

$$\begin{aligned} \text{일인당 지역민 순소득} &= \text{지역민 순소득/인구} \\ &= (\text{지역민 순소득/지역내 순생산}) \times (\text{지역내 순생산/취업자}) \times (\text{취업자/인구}) \\ &= \text{생산·소득의 괴리율} \times \text{노동생산성} \times \text{취업자 비율} \end{aligned}$$

10) 이 요인 분해 방법은 일본 經濟企畫廳(1990: 54)를 참조했다.

<그림 10>은 각 시·도별 일인당 지역민 순소득(순본원소득)과 노동생산성, 취업자 비율의 격차 및 생산·소득의 괴리율을 나타낸 것인데, 그림에서 일인당 지역소득, 노동생산성 및 취업률의 격차의 경우 각 시·도의 실제 값에서 하위 8개 지역의 평균값을 뺀 값으로 나타나 있으며¹¹⁾ 생산·소득의 괴리율은 (지역민 순소득/지역내 순생산-1)×100으로 그려져 있다. 일견할 때 우리나라의 일인당 지역민 순소득은 서울과 울산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그 외 지역은 그다지 편차가 심하지 않아,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주로 서울 및 울산과 기타 지역 간 격차라는 것을 알 수

<그림 10> 일인당 지역민 순소득, 노동생산성, 취업자 비율의 격차 및 생산·소득의 괴리율



자료: 통계청

11) 전국 평균값을 쓰지 않고 하위 8개 지역의 평균값을 쓴 것은 서울과 울산의 일인당 지역소득이 두드러지게 높아 산술평균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있다.

그런데, 지역소득을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 지역 간 취업자 비율은 우리나라 지역 간 격차에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노동생산성 격차는 지역별로 매우 편차가 커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즉, 서울,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노동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기존 연구에서 이 노동생산성을 지역 간 격차의 핵심요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간다. 한편 지역 내 소득분배율도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지역 간 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 즉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예외 없이 지역 내 소득분배율이 마이너스 20~30%로서, 높은 노동생산성을 지역 외 소득 유출이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다. 다만 서울만 노동생산성과 아울러 타 지역으로부터 소득 유입(지역내 순생산 대비 18.6%)이 커서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높은 지역소득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은 노동생산성의 격차와 지역 내 소득 분배율(소득의 지역내 유출입)의 격차라고 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 양자가 상쇄되어 생산된 소득 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거나, 서울만 유독 양자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 광역대도시는 생산성은 낮지만 주변지역으로부터 소득의 순유입이 발생하여 생산이상의 소득을 시현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런 생산과 소득의 괴리, 즉 거주지와 소재지의 차이에 의한 지역소득 통계상의 지역 간 소득의 이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수도권 집중문제가 거론될 때 마다 우리나라와 종종 비견되어 온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표 13>을 보면, 일본의 경우 거주지와 소재지의 차이에 의한 지역 간 소득의 이동은 오히려 수도권인 관동이나 동경이 순유출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어 소득의 순유출은 오히려 소득의 수도권 집중의 완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다른 이유

<표 13> 일본의 지역별 현민(縣民) 소득과 생산 및 소득의 괴리 비율(2008년 기준)

(단위 100만 엔, %)

	지역별	현민 순소득	현민 순생산	현외로부터 순소득	현민 소득 / 순생산 비율
권역별	北海道·東北	42,571,796	41,170,059	1,401,737	103.4
	關東	149,232,516	152,998,462	-3,765,946	97.5
	中部	55,803,287	58,041,772	-2,238,485	96.1
	近畿	59,752,308	60,359,335	-607,027	99.0
	中國	20,470,743	20,502,629	-31,886	99.8
	四國	9,598,503	9,458,497	140,006	101.5
	九州	34,868,124	33,904,195	963,929	102.8
대도시 (政令指定都市)	札幌市	4,705,979	4,700,197	5,782	100.1
	仙台市	2,872,670	2,846,464	26,206	100.9
	さいたま市	3,667,903	2,847,528	820,375	128.8
	千葉市	2,874,128	2,536,465	337,663	113.3
	横浜市	11,323,055	9,364,634	1,958,421	120.9
	川崎市	4,511,643	3,968,765	542,878	113.7
	名古屋市	7,462,323	11,143,489	-3,681,166	67.0
	京都市	4,368,506	4,444,078	-75,572	98.3
	大阪市	8,562,455	16,518,163	-7,955,708	51.8
	神戸市	4,503,975	4,571,499	-67,524	98.5
	廣島市	3,675,671	4,012,575	-336,904	91.6
	北九州市	2,641,624	2,691,520	-49,896	98.1
	福岡市	4,389,360	5,319,061	-929,701	82.5
東京都	53,349,583	72,408,553	-19,058,970	73.7	

자료: 內閣府(2010), 『縣民經濟計算』.

는 일본의 경우 어느 정도 지방에 교육, 문화 등의 정주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동경에 집을 두고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梶善登, 2006), 지방에 분공장을 두는 경우도 분사형태로 지방에 지역본사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의 생산

·소득 괴리율(지역소득/생산비율)의 변동계수를 구해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0.19인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0.10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그 수치가 훨씬 크다. 이것은 생산·소득의 괴리율이 일본보다 한국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의 규모나 특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¹²⁾

5. 맺음말

충남이 특히 타 지역에 비하여 소득의 역외 유출이 심한 것은 대기업 공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 북부지역(천안, 아산 등)이 수도권과 인접한데다가 교통여건이 좋아, 지역소재 기업 근무인력 중 상당수가 생활여건이 편리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통근 또는 단독부임 행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성전자 등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입지해 있지만 분공장 형태로, 정작 공장에서 창출된 영업잉여는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역민들의 소득과는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실적에 치중한 양적인 기업유치 정책에서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및 토착화의 유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질적인 측면의 기업유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수도권으로부터 통근인구가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을 유치할 때

12) 한국과 일본의 생산·소득 괴리율의 변동계수는 한국의 경우 16개 시·도, 일본의 경우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변동계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분포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이다. 이 값이 작으면 격차가 작고, 이 값이 크면 격차가 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인당 지역민 순소득을 분해하면 생산·소득의 괴리율과 노동생산성 및 취업자 비율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되므로, 지역 간 격차를 결정하는데 생산·소득의 괴리율이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그 변동계수가 크다는 것은 이 격차가 지역 간 격차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공장 형태가 아니라 본사까지 지역 내로 유치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홍성효(2011)는 유치기업을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와 공장만 이전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전 전후의 고용변화를 집단 간에 비교하였는데,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컸다. 더 나아가서는 외생적 전략에서 내발적 전략으로 정책 전환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KTX의 개통 및 천안까지 수도권 전철의 연장 등과 같이 교통 편리성이 더욱 좋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수도권으로부터의 통근 인구는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충남도의 단독 재정만으로 수도권의 생활여건에 비견할 만한 정주여건을 지방에 구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토구조의 재편과 수도권 집중 억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¹³⁾ 그동안 시장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일군의 학자들은, 공간규모를 통제해 분석할 경우 한국은 프랑스나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심하지 않고(김광호, 2009),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비도시 지역과 지방 대도시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 간의 생산력 격차는 시장기제와 기업의 선택에 의한 지역별 산업특화의 지리적인 반영의 결과이므로 수도권 집중 폐해의 억제와 규제 지속은 타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해왔다(문형표, 2003; 김종일, 2008 등). 그러나 이들 결론은 지역 총생산 지표를 가지고 도출한 것이며, 지역민 총소득을 가지고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지역구조는 여전히 소득을 흡인하는 수도권과 흡인당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이분법으로 나뉜다. 그동안 지방의 비대도시 공업지역의 발달로 생산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소비의 집중지로서 서울의 일극집중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서울-본사경제, 지방-분공장 경제란 구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서울과 여

13) 이런 주장은 강현수(2007), 강현수·황희연(2007), 변창흠(2009 및 2011) 등에 의해 여러 번 논의되어 왔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 논문들을 참조할 것.

타 지역 간의 지역 간 격차와 소득 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 스스로의 내발적 발전의 노력과, 국가 차원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지방으로부터의 소득 유출과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역소득계정을 가지고 소득의 유입, 유출을 파악하였으나, 통근인구 규모나 영업잉여의 본사 유출 규모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유출 행태와 실태, 유출되는 시·도 지역의 방향 등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지역소득 계정상 속지(屬地)주의와 속인(屬人)주의의 차이로 인한 소득의 유출입이 지역 간 소득 격차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를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대상으로 비교해 봤는데, 이 분석방법이 보다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분배 지역소득 통계가 2009년부터 개발되어 아직 정치도가 떨어져 일부 자료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¹⁴⁾ 또 일본의 경우 소득의 수도권 유입이 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하는 이유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향후 과제로 남긴다.

14) 예를 들어 고정자본소모액의 경우 생산과 분배 양 측면에서 규모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지역소득계정에서는 일치하지 않아, 지역 외 순수취분원소득의 계산에 일부 통계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Abstract

A Study on Income Outflow between Regions: focus on Chungnam

Park, Kyoung

Chungnam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region, but ranks highest in the ratio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ss Regional product and Gross Regional income. Income-outflowing to other regions, instead of income-allocation in the area, results in this kind of big gap between production and income.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ion and income, and the income inflow and outflow among 16 Regions nationwide and Chungnam, using regional distribution income statistics published after 2009.

We found Chungnam has a branch factory economic structure, which causes extreme income outflowing to other regions. Therefore, Chungnam should change to the endogenous growth strategy from the exogenous growth strategy when it attracts company investment.

In Korea, the one region centered structure still exists as income and consumption are concentrated in Seoul. In order to solve income outflow between regions, the economic structure of headquarter in Seoul and local branch factories in Chungnam and other region should be changed.

Keywords: Income Outflow, branch factories, exogenous growth

참고문헌

- 권태현·박민철. 2009.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 간 연
간관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강현수. 2007.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정책 방향」. 《공간과 사회》,
통권 제27호, 52~80쪽.
- 강현수·황희연. 2007.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정책을 위한 제언. 산업연구원 발간
《지역경제》, 제3권 4호, 통권10호.
- 김종일. 2008. 「지역경제력 격차에 관한 연구」.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KDI.
- 문형표. 2003.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분권화」. 문형표 편. 『2003년도 국가예산과 정
책목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박 경. 1998.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전략의 실상과 과제-충청남도를 중심으
로」.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 제2호.
- _____.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내생적 발전」.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원. 《사회과학연구》, 제47집, 88~123쪽.
- 변창흠. 2008. 「참여정부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_____. 2011.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충청권의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
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자료.
- 신동호. 2010. 「충남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충남리포
트》, 제41호(2010-13: 2010.8.16), 충남발전연구원.
- 유병철·박성익. 2004. 「지역소득 수렴여부와 성장요인분석: 동태 이질적 패턴모형의
활용」. 《국제경제연구》, 10권 2호, 105~126쪽.
- 임재영. 2010.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2007년)」. 《충남리포트》, 제42호
(2010-14: 2010.8.19), 충남발전연구원.
- 장재홍. 2011. 「위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공간과
사회》, 통권 제37호, 129~165쪽.
- 통계청. 2010. 「지역소득 해설」.
_____.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7. 「충남지역산업연관 분석」.
- _____. 2008.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 _____. 2011.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 및 발전방향」.
- 허문구. 2006. 「지역 간 소득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
제》, 49~62쪽.
- 홍성효. 2011.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 정책의 개선방

- 안, 《충남리포트》, 제59호(2011.11.30).
- 宮本憲一·横田茂·中村剛治郎 編. 1990. 『地域經濟學』. 有斐閣.
- 梶善登. 2006. 『地域間格差の推移とその背景』. 國立國會図書館. 《レファレンス》, 平成18年4月号, 83~104쪽.
- 內閣府. 2010. 『縣民經濟計算』.
- 經濟企畫廳. 1990. 『景氣擴大が浸透した地域經濟: 平成2年地域經濟レポート』.
- Cooke, P., Price, A. & Morgan, K. 1995. "Regulating Regional Economies: Wales and Baden-Wurttemberg in Transition." in Rhodes, M. (ed.) *The Regions in the New Europ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Jung Won Sonn and Dongheon Lee. 2011(Forthcoming). "Revisiting the Branch Plant Syndrom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Regional Studies(submission)*.
- Phelps, N. A. 2008. "Cluster or Capture? Manufactur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External Economies and Agglomeration." *Regional Studies*, 42, pp.457~473.
- Phelps, N. A., Mackinnon, D., Stone, I. & Braidford, P. 2003. "Embedding the multinationals? Instit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verseas manufacturing affiliates in Wales and North England." *Regional Studies*, 37, pp.27~40.
- Turok I. 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27, pp.401~417.
- Young, S., Hood, N. & Peters, E. 1994.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28, pp.657~677.